

데스크 시각



임 동 옥
서울 취재본부 정치부장

새정치연합 사측생 정신 되새겨야

제정의 책임은 여당과 정부에 있음에도 새정치연합은 오히려 정국 파행의 정치적 '독박'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배를 거듭하고 있는 새정치연합의 현실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소통과 신뢰보다는 계파를 중심으로 한 불신과 반목이 뿌리 내린 정당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전략도 없는 제1야당

실제로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당내 소통을 이루지 못하면서 세월호 정국의 불교를 트는 데 실패했다. 박 대표가 성과에 너무 집착,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좁힌 탓이다. 당내에서도 박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며 문제를 풀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부 계파를 중심으로 강경 일반도의 특별법 재협상을 주장, 오히려 분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일부 중진의원들은 느닷없이 박영선 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임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비대위가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위원장의 거취를 거론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표면적 이유로는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 겸임은 세월호 정국을 풀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면에는 지역위원장 선결과 차기 당권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역위원장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직강화 특별위원회 구성 권한과 함께 공천 혁신의 방향을 정한다.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차기 당권 향배는 물론 차기 총선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7·30 국회의원 재보선 참패 이후 새정치연합이 비상대책위원회의로 체제 전환과 함께 약속한 대대적인 혁신도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당장, 장외 투쟁으로 인해 비대위 구성도 상당 기간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을 상징할 수 있는 외부 인사가 비대위에 참여할 것인지도 장담할 수 없다. 지난 17대 대선 이후 여섯 차례나 비대위가 구성되면서 각종 혁신안을 내놓았지만 계파 정치의 이해관계에 막혀 현실화될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기득권 포기, 계파 청산해야

정치 일정도 만만치 않다. 내년 1월 전 당대회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늦어도 12월에는 비대위에서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정국 타개가 쉽지 않아 국정감사, 정기국회,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의 일정도 줄줄이 밀릴 수밖에

에 없는 상황이다. 심도 있는 혁신안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다. 해결책은 어려울 것 같지만 의외로 간단하다.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나 윤 일병 폭행 치사 사건의 본질은 승무원의 무책임과 일부 병사의 엽기적 폭력보다는 이를 사실상 외면하고 방조해 왔던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적 현실에 있다. 불의에 맞서는 용기보다는 방관하는 현실이 세월호 참사와 윤 일병 폭행 치사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다. 새정치연합의 현실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계파정치에 기대서는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을 닦을 수 없고 국민적 공감도, 혁신도, 정권 창출도 이룰 수 없다.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파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혁신의 길이 열린다. 최근, 루게릭 환자들을 돕는 '얼음물 샤워' 캠페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 차가운 얼음물 세례로 사회적 온기를 모아가는 역설적 방법이 이색적이다. 새정치연합도 '기득권 포기 샤워'가 필요하다. 당내 계파의 수장과 대권과 당권을 노리는 원내외 중진부터 기득권 내려놓기에 나서야 한다. 회생과 혁신을 통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영화 '명량'에서 부활한 이순신 장군의 '생자사 사측생(生則死 死則生)'의 정신을 다시 새겨야 할 시점이다.

은편칼럼



박 홍 군
양림플랫폼 대표·건축사

광주 '도시·건축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

의 편리성,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공간 설계 등이 타 도시에서 경험하기 힘든 수준으로 잘 되어 있다. 이런 결과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첫째, 건축심의제도다. 거의 모든 건축물은 심의를 거치게 된다. 건축심의지침에는 건축의 공공성이 강조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다. 이 지침을 따르며 설계를 해야 한다. 벗어날 뎀심의 자체가 통과되지 않는다. 즉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지침만이 잘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운영도 잘하고 있는 듯하다. 둘째, 지역건축가(BA제도·Block Architect)제도다. 건축주는 도시를 분양반기 위한 입찰 전, BA지침을 확인하고 투찰에 들어간다. BA지침은 개별건축물의 건축심의지침만으로 다루기 힘든 도시이미지, 매력, 건축과 문화 콘텐츠를 확보하도록 한 단지별 지침이다. 이는 통합설계가 되도록 유도한다. 개별 부지에만 국한된 설계가 아니라 옆 부지와 단지를 생각하고 도시 전체의 일부로서 균형과 조화를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건축주의 사업성에, 사용자와 도시 경관에 대한 공공성·공동성을 강조한 세종시 건축정책

중 하나다. 이를 보면서 우리지역의 건축정책과 건축의 실상, 설계의 최선봉에 있는 건축사의 역할에 대해 다시금 되돌아본다. 건축정책과 건축심의지침의 미비, 건축주 이익 극대화 위주의 건물, 건축주 앞에 작아져 있는 설계자(건축사)의 모습 등등. 나 도 이에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건축정책 시스템과 운영, 시민의 동참으로 풀어야 한다. 그러나 민간건축의 사회적 역할이나 공공성 확보를 자발적으로 기대하기란 어렵다. 건축주의 이익 극대화와 건축의 공공성·공동성을 조율할 디테일한 지침이나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건축정책위원회'제도를 참고 할 필요가 있다. 건축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건축심의기준을 만들고, 적극적인 실천과 자문·참여 등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광주도 시장 직속의 "도시·건축 정책 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 우리내 실정에 맞는 건축심의지침을 만들고, 각종위원회를 조율하고, 도시·건축의 비전도 제시하

기고



오 민 군
순천대 도시재생대학원 교수

자연의 씨줄과 문화의 날줄로 엮어내는 천가지로

원도심 인구는 최근 30년간 2만4679명에서 9939명으로 59.7% 감소했고, 원도심 내 65세 노령인구 비율이 17%에 달하며, 산업체는 최근 10년간 34.3%가 감소했다. 또 20년 이상의 노후건축물이 78.1%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쇠퇴한 곳이다. 이러한 원도심이 선도지역으로 선정되기 전까지 무슨 일이 있었었던 것일까. 지난해 4월30일 토요일 오전은 순천이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시민주도로 도모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바로 그날 순천시 도시재생 담당 공무원과 무려 4시간의 대화 끝에 '시민주도 도시재생 전략 수립 집중검토회의'를 실시하기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행정체제의 속성상 이러한 방법을 선택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시민주도 도시재생 전략수립 집중검토회의'가 개최되게 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순천만의 성공적 보전과 함께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던 순천시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를 실현토록 해야 한다. 이는 공공건축에서 시법적으로 운영하면서 민간건축도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의 많은 건축물은 개인 소유물이지만 동시에 시민전체가 공유하는 자산이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공성과 공동성을 확보해야 한다. 건축으로 이루어진 도시환경은 후손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유산이 된다. 광주의 역사, 생태, 민주, 인간의 정체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건축정책과 그 실천이 필요한 이유다. 건축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시의 역사와 시대정신이 담긴다. 나아가 관광상품이 되기도 한다. 우리 지역에도 그런 건축물이 많이 만들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한 지속가능한 기본원칙들이 만들어 지고, 지켜가며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도시의 모든 건축물은 시민들 모두가 누리는 공공자산이고, 건축은 도시와 인간의 삶 속에 더불어 존재한다. 건축은 우리 삶을 지속해 가는 가장 중요 안식처이고, 시대가 빛는 창조적 산물이다. 그리고 건축은 결국 그 도시와 사회의 얼굴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說

농촌지역 악취에 귀농·귀촌인 발길 돌린다

전남지역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깨끗한 공기와 오염이 덜 된 자연환경도 주요 원인일 것이다. 하지만 근래 농촌의 필수시설인 축사나 액비공장 부근의 악취 민원도 크게 늘고 있어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전남도내 악취 민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곳은 공ფ혁신도시인 빛가람시가 들어선 나주시다. 한국전력 등 대기업 이전으로 임직원 가족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부터인데 농촌에 산재한 축사나 비료제조 시설에서 풍겨 나오는 역취는 냄새 때문에 이들 도시이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으면서 문제 해결을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 혁신도시 임직원 가족들이 집단적으로 이주를 시작한 2012년 나주 지역 악취검사 의뢰는 48건으로, 전년도 8건에 비하면 5배 이상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말까지 42건이 접수되면서 전남지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원인은 혁신도시 주변 축사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악취는 매우 민감한 민원이지만 이를 측정해 법률적인 절차가 적용되는 '부적합' 판정을 내리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리 과정도 복잡하다. 시가, 방법, 장소, 감사원의 감정적 상태 등에 의해 결과가 좌우되고 민원인들이 감정에 따라 느끼는 악취의 정도가 달라지는 등 측정 역시 쉽지는 않다고 한다. 농촌지역의 악취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족을 기르거나 퇴비 등 비료 제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국은 주거지 인근 악취 유발 요소를 특별 관리해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업자도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냄새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혁신도시는 물론이고 새삼의 터전으로 전남을 찾는 도시민의 발길을 늘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끊이지 않는 광산구 공무원들의 뇌물 비리

광주시 광산구 공무원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과 1년도 안 돼 무려 18명의 공무원이 뇌물·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가 하면 최근에는 건축 담당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고 인·허가를 해줘 '비리 복마전'이라는 오명마저 쓰고 있다. 25일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광산구 공무원 A(49)씨는 완공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사전 사용승인해 주는 대가로 건축사 D씨로부터 현금 1300만 원과 400만 원 상당의 향유를 제공받았다고 한다. 또 경찰은 수백만 원의 향유를 받은 공무원 5명 중 B씨를 일간하고, 나머지 4명은 해당 구청에 징계를 의뢰했다. 이들은 광산구 수완지구에 조성 중인 고급 빌라 AM-Village 26세대에 대해 완공률 80%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도 없이 3~4일 소요되는 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하

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 시공사 대표와 건축사가 공사 지연에 따라 입주 예정자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사용승인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이다. 광산구는 최근 1년 동안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청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쇄신의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해만 5회에 걸쳐 청렴교육을 한 데 이어 올해도 8차례나 교육을 진행했지만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아 '허구호'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공무원 일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고질적이고, 총체적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지자체는 비리가 터질 때마다 각종 대책을 내 놓고 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광산구는 비리 공직자들이 받을 불이익 없도록 영구 퇴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쇄신을 하지 않는 한 비리 근절은 있을 수 없다.

無 等 鼓

요즘 방송을 보면 재혼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한다. 일부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에는 '재혼 리얼 버라이어티'를 표방하는 프로그램들이 방송대 인기를 끌고 있다. 그렇지만,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재혼이 그동안의 금기를 깨고 사회의 전면에 등장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초기에는 양반 집 여성이 두세 번 결혼하는 것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유교를 국시로 삼은 조선에서는 두 남편을 섬기는 여성을 곱게 놓아줄 수가 없었다. 부녀자의 절개는 선택의 문제여서 국가에서 다룰 때가 없었지만, 조선은 고된 끝주도 도시재생 전략수립 집중검토회의가 해당 법률 제정 이전인 4월에 결정, 실시하게 된 것은 참으로 우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전국 최초로 시민주도로 도시재생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이 도시재생전략의 수립은 순천이라는 지역적 관점과,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원도심이라는 여건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직접에 걸쳐 쏟아낸 아이디어들에 대해 토론과 합의를 통한 결정(結晶)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순천은 원도심 주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를 통해 순천 고유의 방식을 착실하게 만들어 가고자 한다. 그리고 '하늘(天)과 땅(地)에 의한 자연환경'과 '거리(街)와 길(路)이라는 시민의 문화교류와 발전의 공간'으로 도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순천 원도심을 되살리고자 한다.

어머나! 재혼하면 그 지식은 과거처럼 자체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 법이 제정되자 재혼 풍습은 일거에 사라졌다. 재혼을 하려면 여성들은 지식 때문에 주저하게 되고, 재혼을 결심한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를 통한 입신출세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던 당시 양반들에게 이 법은 가문의 사형선고나 다를 없었다. 그래서 조선 후기부터는 재혼녀가 사라지고, 대신 열녀가 폭증했다. 조선은 이들 열녀에 대해서는 포상을 함으로써 적극 권장했다. 예전 장권(獎券) 조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효도, 우애, 절의 등의 선행을 한 자를 해마다 연말에 세종 16년인 1485년 '재가녀자순금 고법(再嫁女子孫禁緇法)'을 발표한다. 조선의 기본법적인 경국대전 가운데 과거와 가족사 등 을 담고 있는 예전(禮典)의 제과(諸科) 조에는 이 법에 대한 설명이 나와있다. '관리로 영구히 임용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자와 장리(나물을 보는 관리)의 아들, 재혼한 자와 실형(간음)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 서얼의 자손은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다.'

재혼

<p>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p> <p>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p>	
<p>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p>	
<p>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p>	
<p>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p>
<p>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p>	<p>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F A X 227-9500)</p>
<p>(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p>	<p>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p>
<p>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p>	<p>(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p>
<p>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p>	